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큰 힘이 됐던 청계천이 이제 거꾸로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광장이 됐다.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은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이명박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2만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4월 29일 광우병의 끔찍한 진실을 보도한 <PD수첩> 방영 이후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의 항의 글과 욕설이 "지워도 지워도 감당할 수 없게"(홍피 관리자) 불으며 4월 30일 이명박의 미니홈피가 문을 닫았고, 이명박 탄핵 서명은 하루에 10만~20만 명씩 늘어나 3일 만에 6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은 5월 5일 MBC <무한도전> 출연을 포기했다.

이명박이 부시에게 광우병 쇠

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선물'을 주고 온 것이 이런 거대한 불길을 불러 왔다.

먹고 발병하면 뇌의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서 1백 퍼센트 사망한다는 '뇌송송 구멍타' 쇠고기를 아무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은 광우병 위험이 특히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뇌·뼈·척수·눈까지 빠짐없이, 심지어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생겨도 중단없이 수입

하겠다고 부시에게 약속하고 왔다.

텔런트 김민선 씨가 말했듯이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고 할 만하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되는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염장 지르기'까지 했다.

» 3면으로 이어짐



미친 이명박 정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구멍뚫린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3면

118주년 메이데이 특집

- 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에서 배운다
- 국민·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하라

4~5, 1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 왜 맑스가 중요한가

8~9면

식량 위기의
5가지 신화를 벗긴다

12~13면



올림픽 성화 폭력 사건과
중화민족주의

7면

존 몰리뉴 칼럼

-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10면

이명박 정부의
세금과 부동산 정책

2, 6면

<맛불> 웹사이트를
http://www.
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일본의 화우 같은 것은 한 마리에 1억 원까지 하지만 없어서 못 팔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

—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쳐버린 것 같다.”
— 안동시 한우협회 조득례 사무국장

“광우병은 오래 가지 않을 질병 ... 광우병이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 농림부 축산국장 이상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광우병 쇠고기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한 것 ... 설거지를 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의 이유있는 억울함

“여기 왔다가 잘 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계산만 갖고 와서 일 해서는 안 된다.”

— 청와대 비서관들의 본심을 찌르는 이명박

“우리는 친시장적 친기업적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합민주당에서 그나마 왼쪽이라는 천정배

“당신과 함께 하는 길은/ 환한 봄날 아침의 목련이었다가/ 폭풍이었다가/ 산수유 가지마다 오종종 걸린 노란 현기증이였다”

〈동아일보〉경제부장 허승호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에게 바친 시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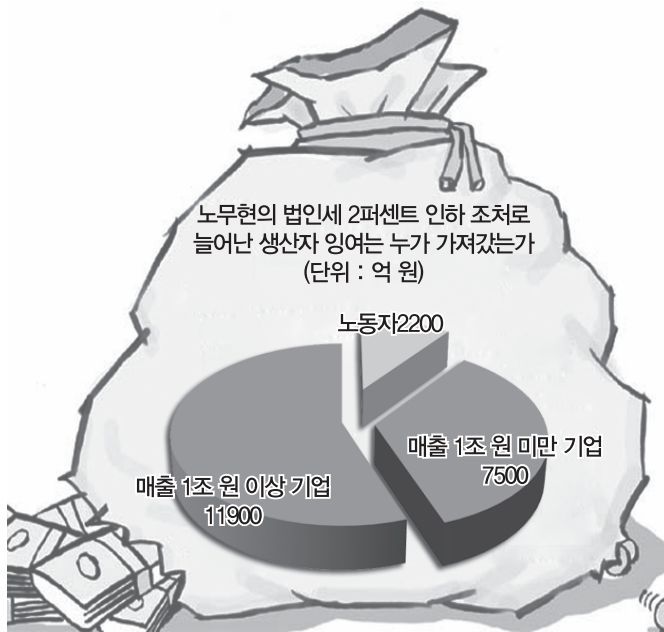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연구소들도 감세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80년대 영국 총리 대처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강만수 같은 감세론자들은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인하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늘리고,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선, 재벌과 기업주에 대한 감세는 내수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특별소비세·소득세를 모두 인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떨어졌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기업 이익 중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비율은 2006년 694.7퍼센트에서 2007년에는 787.9퍼센트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 경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 2퍼센트 인하 정책의 효과(한국조세연구원)

제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전망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어두우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0.1퍼센트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조세연구원이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보면, 법인세 인하로 늘어난 잉여의 대부분이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에 기여했고, 그 중에서도 매출이 1조 이상인 법인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법인세 인하

로 전체 법인 기업의 0.1퍼센트가 감세 혜택의 60퍼센트를 가져간다.

이들 대기업은 지배하는 것도 이견희와 정몽준 같은 소수의 부자들이므로 법인세 인하는 이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노무현 정부보다 폭도 더 크고 전면적이므로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감세가 끝이 아니다. 그 줄어드는 세수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생필품 세금 면제를 축소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법인

세나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므로 부자나 서민이나 같은 금액을 낸다.

떠넘기기

2007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상위소득 20퍼센트는 소득의 51.4퍼센트만 소비하지만 하위 20퍼센트는 97.5퍼센트를 소비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이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소득 분배가 완전히 왜곡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예산을 10퍼센트 삭감하려 한다. 국방비와 같은 예산은 줄여들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복지비를 더 줄이면 양극화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에 반대하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요구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비중을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권오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서범진

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다.

사실 이런 충격적 사건들은 계속 반복돼 왔다. 2005년에 CJ홈쇼핑 회원 2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2007년에도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7백

기업과 정부는 ‘빅브라더’가 되려 한다

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적했듯,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에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대규모로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상품 판촉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여러 곳에 활용하려 한다.

실제로 경실련 발표를 보면, 63개 거대 온라인 업체 중 20개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있는 회원 가입 약관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따라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각종 금융·보험·행정 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 번의 해킹으로 수많은 관련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정보 보안 전문가인 KAIST 문송천 교수가 비판하듯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각종 거래 등]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온라인의 경우만 봐도,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나 야후 등 외국계 포털 사이트는 가입할 때 이름과 주소 정도만 요구한다. 문 교수는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는 규제에 나설 생각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을 통한 사이트 가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개인 정보를 포털 사이트 대신 아이핀 발급 회사가 모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 등은 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서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경악스러운 계획도 발표했다. 또 전자주민증과 생체 여권 등을 도입해 그 자신이 ‘빅 브라더’가 되려 하고 있다.

진보 운동, 특히 노동 운동은 기업이 개인의 사적 정보를 돈벌이 삼고 정부가 개인을 살살이 파악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에서 몇 해째 잠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즉각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노동 운동 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미친 소 전면 개방은 불을 댕긴 것일 뿐,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달 동안 이명박은 멀미가 날 정도로 많은 개악과 반동을 쏟아 내 왔다. “땅을 사랑할 뿐”이라던 강부자 내각 파동, 청소년들 사이에 ‘개명박’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영어몰입교육’ 파동이 있었다.

떡값 두목 이진희에게는 노골적인 유전무죄 면죄부가 주어졌고, 독재정부 때 시위대를 때려잡던 백골단이 부활했다. ‘학원천국 입시지옥’을 낳을 ‘학교 자율화’도 발표됐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와 재앙을 낳을 대운하도 추진되고 있다. 고유가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이명박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은 물가 인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서민들은 자장면 먹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

총선 이후에는 “가속을 내서 … 피부에 와닿는 결과를 나오게 하자”며 대량해고와 공공요금 인상 등을 낳을 공공부문(지하철, 물, 전기, 가스) 사유화·시장화도 서두르고 있고, 무제한적 비정규직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다 못해 살갓이 벗겨질 지경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이들이 입만 열면 가난한 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염장 지르느’ 싸가지없는 말만 내뱉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런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서 가난한 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명박은 미친 소 전면 개방으로 한미



‘강부자·미친 소 프렌들리’로 돌진하는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버려야 한다

FTA를 비준해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만 신경 쓸 뿐, 국민 건강과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텔런트 김민선 씨가 말했듯이 “우린 숨도 쉬고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돈이 아닌”데 말이다.

강부자의, 강부자에 의한, 강부자를 위한 정부

농림부장관 정운천도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멸시했다. 그러면서 막상 한미 쇠고기 협상문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중동도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과 “반미 선동”이 문제라며 이명박을 거들고 있다. 그래서 5월 2일 촛불 집

회에서 “조선일보 쓰레기”, “동아일보 쓰레기”라는 구호가 인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누구보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88만 원 세대’가 이명박에 맞서 앞장서 싸우기 시작했다. 5월 2일 촛불집회의 주역은 바로 이들이었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원더걸스의 팬클럽 회원들도 청계광장으로 모이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급식업체의 80퍼센트가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는 지금, 학교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 세대들, 이명박의 ‘우열반, 0교시’ 부활로 말라죽게 된 세대들이 앞장선 것이다.

이들의 분노와 저항 속에 지금 이명박은 취임 두 달 만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지난 몇 달 동안 되려 떨어진 것이 바로 이명박의 지지율이었다. 미친 소 수입을 막고, ‘재벌천국 서민지옥’ 정책을 중단시키고, 온갖 개악들을 저지하려면, 벌써 지지율이라는 기름이 떨어져 덜덜거리기 시작한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버려야 한다.

그런데 친미우익이고 차떼기 2중대인 친박연대,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개방 등의 물꼬를 튼 장본인인 통합민주당, 지난 대선 때 “쇠고기 개방 반대는 미국 축산업자 차별”이라고 했던 창조한국당 등으로 채워진 국회가 이명박 불도저를 막을 리는 없다. 세 당은 모두 비례후보 공천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광우병 청문회에 합의한 대신 한미FTA 비준안은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등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명박에 맞서 함께 싸울 주역들이다. 노동자와 ‘88만원 세대’ 청년·학생의 강력한 단결과 거대한 투쟁만이 고장난 불도저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6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에 저항하는 범국민 긴급대책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범한 공동 투쟁 기구를 통해 강력한 대중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공무원 연금 개악, 공공부문 사유화, 비정규직 약법 확대 적용, 물가 인상 등에 맞서 이제부터 본격화될 노동자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5월 2일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대중 행동과 서울 도심에서의 위력적인 거리행진 등이 계속 확대 발전되면서 강력한 노동자 파업 등으로 연결된다면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은 ‘다우너’(광우병 걸린 소)처럼 맥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전지윤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강동훈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이랍시고 군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두 가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3억 명 넘는 미국인, 3백50만 재미교포와 11만 유학생과 한국 여행자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키우는 소 1억 마리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는 3마리밖에 안 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의 0.1퍼센트만 광우병 검

사를 하기 때문에 3마리가 나왔다면 전수 검사를 했을 때 3천 마리가 나온 셈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믿으라고 강변하는 OIE를 미국 정부조차 믿지 않는다. OIE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중 30개월 미만의 것만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식품 검역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드러났다. 4월 10일에는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학교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폭로돼 6만 4천여 톤의 쇠고기가 리콜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철저히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수출

할 것”이라며 검역 권한을 미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넘겨 버렸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나타나더라도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없게 됐다.

군색한 변명

이명박은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며 시장논리를 들이밀지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쇠고기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이나라면·화장품·의약품 등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삼겹살 대신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선전하더니, ‘한우 경쟁력 강화’ 운운하며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소를 예로 들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강부자’와 ‘대한민국 1퍼센트’는 한 마리에 1억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테니 노동자·서민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과 같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반미 선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게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이명박이 말하는 광우병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자들은 바로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하더니 이제 와서는 태도가 돌변해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에게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천국, 서민 지옥 프로젝트인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내다팔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한미FTA에 반대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맛불> 웹사이트의 관련 기사들을 참조하시오.

■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안형우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은 52개 생필품 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4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이명박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름 값, 곡물 값을 싸게 할 수 있겠나”(4월 23일 재외공관 장 만찬) 하고 말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대학 자살하는 ‘등록금 자율화’나 마찬가지다. 물·전기·가스·철도·의료 사유화는 생활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다.

44개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폭동의 근본적 원인들은 모두 지배자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에 비해 다섯 배 뛰었다. 부시가 시작하고 조무현·이명박이 도운 이 전쟁으로 중동이 불안정해진 것이 큰 이유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석유·곡

물·철강 등 ‘원자재 펀드’로 몰린 투기는 유가 급등에 40.3퍼센트나 영향을 미쳤다(<주간 한국> 2218호). 이 와중에 국내 정유 3사는 지난해 각각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었다.

곡물 가격 급등도 세계 곡물 시장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 등 5대 메이저 곡물 기업들에게는 돈 잔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은 “물가 상승이 고용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자]”며 사실상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영업총비용 대 임금 비중은 2006년 현재 11.15퍼센트에 그친다.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이 10퍼센트 올라도 영업총비용은 1퍼센트 남짓 오를 뿐이다.

또, 2000~2007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은 약 90퍼센트나 상승한 반면 실질 임금은 37.5퍼센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늘어난 이윤의 나머지 부분은 고스란히 사장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경총의 임금 억제 요구는 물가 인상이 낳는 실질 임금 삭감 효과를 견디라는 말이다.

1989년에 물가 폭동이 낳은 베네수엘라 민중 봉기(카라카소는 결국 차베스 정부를 탄생시켰다. 최근 이집트에서는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 총파업이 친미 독재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도 물가 인상에 걸맞는 고용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생활 물가 안정화를 위한 과제들

온갖 물가를 인상시키는 유가 폭동의 주원인인 중동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 점령 종식과 자이툰 철군이 필요하다. 중동의 정치적 안정은 이라크 점령 미군의 즉각 철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이툰 철군은 미국의 중동 점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국내 정유 3사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폭리를 환수해야 한다. 이 비용을 대중교통 개선에 지원하거나 화물·덤프 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경우가 인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강부자’들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비 인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임시경정 완화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노동자 한 달 지 평균임금인 1백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주파수의 국가 통제와 KCT의 재공영화를 통해서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물·전기·가스·철도·의료의 사유화도 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물가 인상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투쟁과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해 이런 요구들을 현실화하자.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발전·화물·철도·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고, 공기업 노동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부 고위층 인사의 비리를 부각해서 마치 노동자 모두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노동자에게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 아닙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지는 처절합니다. 다른 기업들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화가 느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큰 격정거리가 인원감축을 포함한 아웃소싱입니다.

경쟁하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논리가 만능처럼 돼 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도 전력 사유화 후 전기요금 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전기요금 인상은 뻔합니다. 게다가 정전사고도 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사기업들이 돈벌이 경쟁을 하느라고 빚어온 끔찍한 사고 아닙니까!

발전소가 분할된 후 고위직 임원 자리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유화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발전회사를 인수할 기업에게는 돈벌이가 누워서 떡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 사유화에 제동을 건 2002년 발전 파업을 평가 하신다면?

그 싸움은 38일 동안이나 지속된 조합원 전체의 헌신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조합원들 스스로의 열정과 불만이 분출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장기간 싸울 수 있었고, 결국 국민에게 발전소



2002년 영웅적 파업을 벌인 발전 노동자들

매각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지받을 수 있었습니

다. 그 투쟁은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사유화 기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

다. 저는 지금도 2002년처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혼연일체가 중요합니

다. 무엇보다 조합원들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발전소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정리 정중남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 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다. 교육 시장화의 일환인 ‘영어 몰입 교육’과 ‘학교 자율화’ 계획이 분노를 샀고, 의료보험 사유화의 끔찍한 미래를 폭로한 영화 <식객>가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더구나 우리는 불과 6년 전 사유화를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공동파업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무려 38일 동안 지속된 발전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은 국민의 81퍼센트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이야말로 이명박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이명박도 단결된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공기업 고위직의 비리를 들춰내어 애꿎은 노동자 공격을 정당화하고, ‘철밥통’이라며 공기업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 이간질할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이런 분열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공공부

문·대기업 노동자가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등을 양보하고 보편료 인상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투쟁의 결집돌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나 재벌과 투기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전체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유화 해 공공기업 노동자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이 곧 진정한 ‘사회연대’다. 2002년 발전 파업은 이 점을 똑똑히 보여 줬다.

발전 파업이 강력했던 것은 무엇보다 연대 투쟁 덕분이었다. 2001년 11월부터 ‘국가기간산업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사유화가 예정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준비했다. 민주노총은 2002년 2월 26일 10만 명이 참가한 연대파업을 조직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발전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연대 집회도

연달아 열렸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산개파업’을 했던 발전노동자들에게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숙식을 제공했고, 승리를 응원했다. 이런 연대투쟁이 다시 조직된다면 얼마든지 이명박의 공세를 분쇄할 수 있다.

‘공동교섭, 공동타결’

물론 지난 번 투쟁의 약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2002년에 발전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공동교섭·공동타결’ 원칙을 어기고 먼저 복귀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두 노조가 타결을 미루고, 모두 승리할 때까지 공동행동을 지속했다면 완벽한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파업 38일째인 4월 2일, 이미 시작된 2차 연대파업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철회한 것이었다. 전국 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 각 연맹이 서울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상황에서 확실한 양보도 없는 ‘노정합의’에서 명한 채 지도부가 파업 종단을 선언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잠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전원 사퇴해야 했다. 이런 비민주적인 일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당시 ‘산개전술’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38일이나 버틴 노동자들의 높은 투지는 놀라웠지만, 동료들과 격리된 채 삼삼오오 숨어 지내면서는 집단적 자신감과 파업 대오의 자긍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점에 집결해 파업 대열의 힘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경찰력의 거점 침탈에 대비한 연대와 지원이 중요하다.

이명박은 각계각파를 통해 공동투쟁을 파하려는 듯하다. 이미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지하철)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따라서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격과 투쟁이 시작된 곳을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투쟁은 올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약법 확대 적용으로 희생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정중남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대안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의 일부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그런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지난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과 파업을 통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2백85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윤태석 부분회장을 만나, 진정한 대안을 제시한 이 투쟁의 교훈에 대해 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노조로 조직했고 정규직화할 수 있었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병원 측이 아는 순간 계약해지되기 때문이었죠. 대학로 모처에 모여서 몰래 모임들을 가졌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어

요. 일년내내 꾸준히 이런 모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비정규직 중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60여 명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

다. 2006년 단체협약에서 서울대 병원은 2년 이상 비정규직 2백39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병원 측은 단 한 명도 정규직화하지 않았고, 2006년 말부터는 2년 미만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속속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약법에 힘을 얻어 사측은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죠.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겠다”, “2년 동안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하는 막

가파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어

요.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돌입했고 흔들림 없이 싸웠습니

다. 그리고 파업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31일 2백85명의 비정규직이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

다게 됐습니

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처우를 끌어내릴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어져서 좋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전환 전에는 밥도 정

규직끼리 비정규직끼리 따로 먹었는데, 전환되고 난 후 섞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

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 몫의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정규직 차별대우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이득을 보았나요? 오히려 산 값에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사측은 만족할

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측은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 몫의 일부를 내놓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한 노조 중에 [오히려] 노동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분열하면 약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정규직인 내

살을 깎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투쟁이 성과를 낸 핵심은 수년간의 투쟁과 꾸준한 토론으로 비정

규직 차별이 정규직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규직 조합원들이 확신하고 있었

기에 온갖 이간질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버티고 싸워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루

어내고, 덕분에 노조 조직력과 노동자 의식도 높아져,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

었습니다.

인터뷰·정리 성향아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규한

부동산 투기로 촉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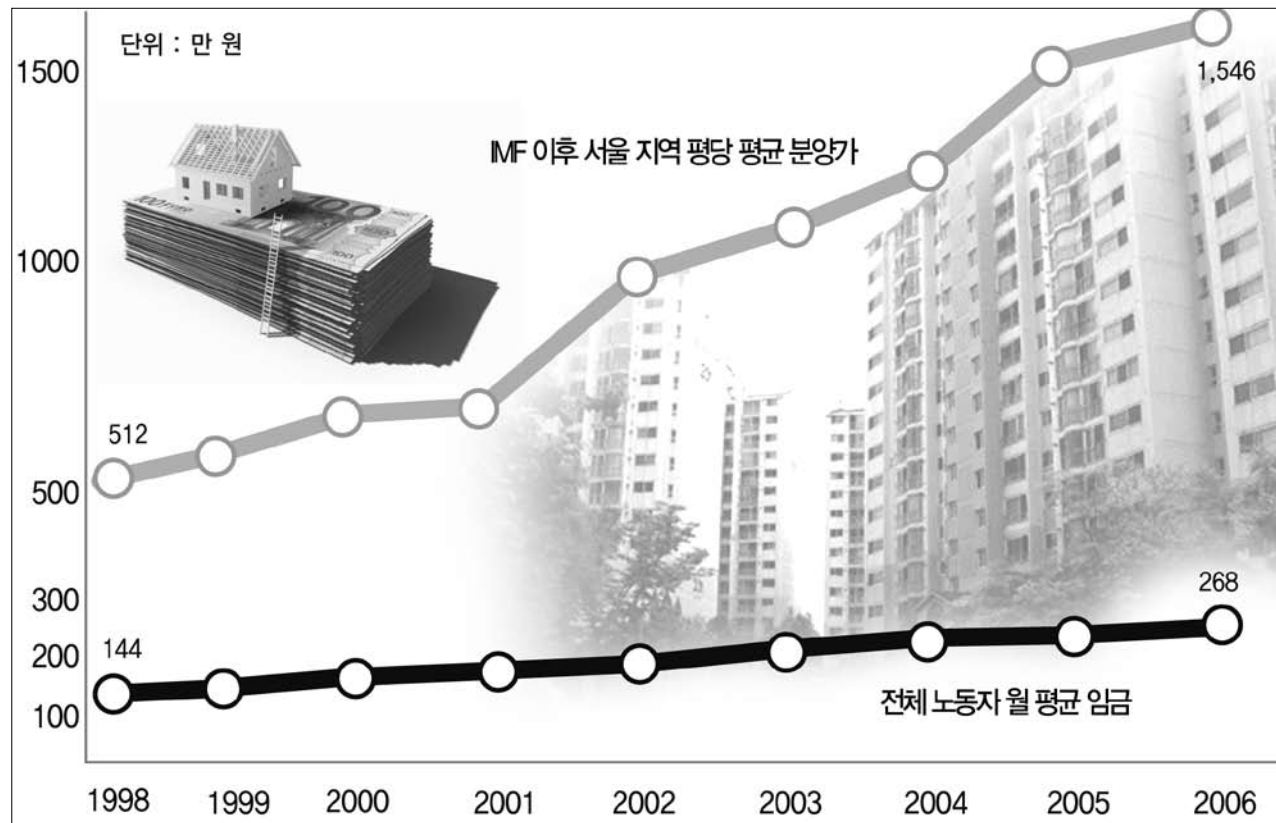
그 결과는 극단적이다. 좁은 땅덩이임에도 한국은 국공유지 비율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 ‘사유재산’의 천국 미국조차 국공유지 비율이 50퍼센트이고 선진국 대부분이 50~70퍼센트 수준이다.

한국인의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5퍼센트가 82.7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최고 땅부자 10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서울시 5개 구(중구, 광진구, 양천구, 동대문구, 금천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부동산 값 폭등 속에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 속에서 건설업자와 투기꾼들은 배를 불렀지만, 무주택 가구의 비율은 1989년 48퍼센트에서 2007년 45퍼센트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2004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3백42조 원인 데 비해 1년 동안 땅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3백46조 원이라고 지적한다.

부자들의 지극한 ‘땅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는 자산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율, 심지어 기업의 생산부문 이윤율보다 대체로 높았다. “1974년부터 1백 퍼센트의 자금을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1987년 3백31퍼센트의 이윤을 얻었지만 땅과 시설에 각각 50퍼센트를 투자한 기업은 6백12퍼센트, 1백 퍼센트 땅에 투자한 기업은 1천4퍼센트의 이윤을 얻었다.”(1992년



〈한국일보〉 보도)

부동산 투기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뿔 수 없는 부산물이다. 박정희 정권은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를 방조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가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됐다. 게다가 풍부한 노동인구 공급을 위해 농민을 도시로 내몰면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찔렀다.

‘땅 사랑’

부동산 가격은 1990년대 들어 비교적 안정화하다 IMF 사태로 잠시 떨어졌지만 곧 다시 뛰었다. 김대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명박

이 추진하는 양도세·상속세 감면,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등이 노무현이 길을 닦아 놓은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이명박과 ‘강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노무현 때였다.

최근 “욕망의 정치” 운운하며 달랑 집 한 채 가진 노동자마저 부동산 투기의 공범인 양 묘사하는 지식인들이 있지만, 그런 노동자들은 주식시장 ‘큰손’들의 작전 주에 걸린 개미군단과 비슷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의 진짜 주범인 재벌은 이윤율이 낮을 듯싶으면 손쉽게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현재 1백대 땅부자 기업 소유의 땅 값만 60조 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비사업용 토지다.

관료와 정치인 들은 정보 독점력과 인허가 권한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남발해 투기를 조장해 왔다. 건교부 관료들이 퇴직하고 가는 곳은 건설기업과 부동산 업체들이다.

결국 거대한 부패와 비리 커넥션이 만

들어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양 비리 사건에는 정치인, 관료, 군장성, 당시 조선일보 사 사장 최병렬 등 6백여 명이 연루됐다.

1991년 수서·대치동 택지 특혜 분양 비리는 당시 노태우 정권 실세들과 한보그룹이 주범이었고 경제기획원, 국세청, 군부대, 언론사까지 연관돼 있었다.

소위 ‘민주화 이후’인 김영삼 정권부터 2006년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부패·비리 사건 중 건설 분야 뇌물사건은 55.3퍼센트를 차지했다.

토지와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시장경제 하에서는 ‘강부자’들만 배불리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 투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높은 누진 부유세 과세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근본적 사회 변혁도 내다볼 수 있게 할 만한 수준의 대중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프랑스 학생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조명훈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며 기세등등하게 “지난 대선 승리는 1968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40년 전 반란의 시작이 그랬듯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공공부문 축소·개약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을 2만 3천여 명 줄이겠다고 했다. 그 중 1만 1천여 명이 교사다.

이에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맞불을 댔다.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최근 3주 동안 여섯 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첫 주에는 2천여 명이 참가했던 시위가 4월 15일에는 2만여 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 시

위에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도 함께 했다. 학생들은 “또 한번의 1968이 필요한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지배자들의 악몽을 일깨우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지배자들을 괴롭혀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2003년에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교육 개악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혀 양보를 해야 했다.

2006년 시라크 정부는 최초고용계약법(CPE) — 26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2년의 수습기간을 뒤 그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든 법 — 을 밀어붙이려 했다가 학생·노동자 3백만 명이 참가한 동맹휴업과 파업에 밀려 철회했다.

무엇보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1968년

반란’의 초점을 제공한 것도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억압적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한 학생들의 투쟁은 서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장 점거와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투쟁의 역사가 보여 주듯, 사르코지를 확실히 굴복시키려면 학생·교원노조의 투쟁과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해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떨어진 사르코지의 정치 위기도 심화할 것이다.

“한국의 사르코지”(〈뉴스위크〉) 이명박도 얼마 전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을 더욱더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 교사들을 확대할 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다. 프랑스 학생들처럼 싸워야 한다.

지난 4월 10일 정부의 교원 감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프랑스 고등학생들

올림픽 성화 봉송 소동과 ‘중화민족주의’

김용욱

4월 27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중국 유학생 일부가 중국의 티베트 만행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과 한국인 시위대에게 저지른 폭력과 위협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행동이었다.

그들은 대안 성화 봉송 행사를 벌인 ‘티베트평화연대’ 회원 3명을 호텔 안까지 추격해 잔인하게 구타하기도 했고, ‘티베트평화연대’가 나눠준 티베트 평화 기원 풍선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공격해 강제로 풍선을 터뜨리기도 했다.

중국 유학생 일부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과격한 행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성화를 보호하고 티베트 지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 세계 대사관에 배포했는데, 이 매뉴얼에는 성화가 인계되는 지점에 20명씩 모여 인간 장벽을 만들어 방해자 진입을 차단하고 중국 유학생들 외에 대규모 단체를 발견하면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안팎에서 있었던 티베트 반대와 성화 방어 시위들이 모두 중국 정부에 의한 관계 동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티베트 사태에 대한 중국 언론의 온갖 왜곡보도와 선전 공세가 작용했지만 많은 시위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됐다. 이것은 ‘중화민족주의’(좀더 정확한 용어는 한족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당화

원래 한족 민족주의는 19~20세기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속에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는 피억압 민중의 민족주의로서 반제 투쟁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이른바 ‘중화권’의 각종 언론과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보면, 시위에 참가한 중국인들은 과거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들면서 자신들이 서방 제국주의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전히 제국주의적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 서방 정부과 그 곳의 주류 언론들이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

티베트인을 공격하는 중국 유학생 – 중국 지배자들이 한족 민족주의를 고무한 결과

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인 탄압이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일부 중국인들의 반티베트 시위 혹은 성화 봉송 지지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제 한족은 더는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고도성장 덕분에 점차 핵심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날 한족 민족주의는 2005년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의 동력이 되는 등 이따금 일리 있는 요구를 담기도 하지만, 주로 티베트 점령이나 중국 군사력 강화, 아프리카 자원 쟁탈전 참가 같은 중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다.

한족 민족주의 강화에는 중국 국내적 맥락도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개발이 낳은 엄청난 모순과 불평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사회의 지니계수(2006년 기준 약 0.5)는 대중 항쟁과 급진화 속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수준에 육박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고 온건한 개혁 조처들 — 농업세 폐지, 노동권을 약간 더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 — 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지배관료는 한족 민족주의를 부추겨 자신들과의 동질성을 인민에게 강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훨씬 값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 정책을 위해서든 국내 통치 질서 안정을 위해서든 한족 민족주의로부터 중국의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중화 제국주의의 부상은 우선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양안전쟁 등 재앙적인 전쟁을 낳을 수 있다. 전쟁으로 총알받이가 되고 전쟁경비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다.

또, 민족주의를 통해 계급 체제의 모순을 감추는 것은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구분

중국 지배자들과 평범한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7일 자행된 폭력에 대한 반감은 이해할 만하지만, 중국인들을 싸잡아 매도한다면 중국 민중 속에서 한족 민족주의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평범한 중국 노동계급과 농민, 학생들을 중국 지배자들의 품으로 더 몰아주며 중화 제국주의와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CNN 한 진행자가 인종차별적 언사 — “지난 50년간 그들[중국인]은 늘

폭력배이자 흉악범들이었다” — 를 사용해 중국인들을 비난하자 중국 지배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대중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부추기고 티베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진중권 씨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도 티베트인들을 공격한 중국 유학생 시위대를 비판한 것은 옳지만 중국인 일반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 것은 부적절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름대로 배워 바깥 물 먹은 유학생들의 국제 감각이 저 정도이니, 나라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인민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게다.”

사실, 지금 중국 정부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민족주의 정서를 고무하고 있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부추긴 시위가 지속될 때 부수적으로 가져올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1989년 톈안먼 항쟁으로 폭발한 중국 학생·노동계급들의 전투성이 1986년 반일 민족주의 시위로 시작됐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에 항의하는 민족주의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잡자기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2005년 반일 민족주의 시위의 분위기를 타고 일본계 회사 유니텐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계급들이 독립 노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려 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던 것도 기억한다.

그래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인민은 애국주의를 조용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혹은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교육’ 때문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다는 인종차별주의적이거나 냉전주의적인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의식이 투쟁 속에서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 지배자들의 민족주의 물이에 도전하고 티베트 민중과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중국 민중의 몫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진영은 중국 지배자와 노동계급·피억압 민중을 구분하는 것 — 즉, 계급 — 을 통해서 그것을 고무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편지

중국인 유학생 시위를 보고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벌인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애국주의 열풍이 분 것이나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난 애국주

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유학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기는 해도 모두 다 편협하지는 않았다. 예전에 만났던 한 중국인은 나에게 ‘동북공정’처럼 중국 정부가 저지

른 역사왜곡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유학중인 한 중국인 학생은 티베트 독립에는 반대하지만 티베트 연대 단체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평범한 대중의 정서를 외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자칫 중국의 빈부격차나 공산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의 중국인들에게는 이번 시위처럼 ‘깃

발’을 보내주면서, 정작 국내의 중국인들이 벌이는 까르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참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06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반대하는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를 지지하는 척하다가, 금세 대규모 반일 시위를 계획했던 여러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린 바 있다.

김재원(중어중국학과 학생)



왜 마르크스가 여전히 중요한가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좌파의 스테디셀러인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의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저항 운동들이 등장했다. 그런 운동들 처음에 촉발한 것은 주요 서방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세계화였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의 조지 부시가 시작한 전쟁 드라이브는 저항을 더욱 격화시켰다.

그러나 이런 운동의 역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00년대 초에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인물들은 운동의 출현과 분권화된 조직 방식을 찬양하는 안토니오 네그리, 나옴이 클라인, 존 홀러웨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이렇다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사그라졌다.

노엄 촘스키는 여전히 끊임없는 미국 제국주의 비판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운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나 전략적 방향 제시 비슷한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나는 새 사상가들을 찾는 것보다 옛 사상가인 칼 마르크스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코웃음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마르크스는 진부한 빅토리아 시대 인물 아닌가?

그러나 마르크스는 진부하기는커녕 가장 현대적인 사회이론가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역동적이고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르크스가 주로 탐구한 주제는 자본주의였다. 그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퍼져나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변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1840년대에 간파했다는 것이다.

1848년에 출판된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간략하게 묘사한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은 1백50년이 지난 뒤에야 만개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마르크스가 파악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걸작인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를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고유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려 노력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통찰이다.

취약성

오늘날의 세계화가 사회적으로 불공정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은 많다. 그러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조차도 그렇다.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경제가 꽤나 빠르게 성장한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체제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며 심각한 경기하강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말한 “시장의 마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 개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단순히 경제 체제가 아니라, 근본적 적대 관계 —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계급 갈등 — 에 따라 분열된 권력 체제이기도 하다고 봤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연료 구실을 하는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 근본적 분열에 따라 사회가 둘로 쪼개지고, 그로 인한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의 계급투쟁 결과가 세계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사상 가운데서 진부하다고 가장 많이 비판받는 주장이 이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19세기에나 있었을 법한 부자와 빈민의 사회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판이야말로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자와 빈민의 양극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식량 가격 인상으로 빈민들이 쌀과 빵 같은 기본 식료를 살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소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몰가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식료품 가격 인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혼돈을 보여 준다.

UN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지난 주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기아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소리 없는 학살이다.”

빈부격차는 선진국에도 존재한다.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세계 최대 부국인 미국에서는 생활수준의 절대적 하락이 점차 문제가 되는 듯하다. 중류층의 가계소득은 지난번 호황의 끝무렵이었던 1999년보다 최근 호황의 끝무렵이었던 2006년에 더 낮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계급 문제를 사회학자처럼 다루지 않았다. 그는 소득 분배 지도나 직업 분포도 따위를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

변화

그가 계급 적대애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것이 권력의 소재를 입증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었다. 현 사회를

유지하는 권력과 변화시키는 권력[이하 ‘힘’으로 옮김 — 편집자 주] 둘 다의 소재지 말이다.

마르크스가 성이나 인종이나 종교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틀린 이유가 이것이다.

마르크스는 갖가지 사회적 분열이 존재하고, 그런 분열을 이용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이 힘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노동이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사용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이 힘은 모든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으로 노동을 중단하고 그럼으로써 이윤의 흐름을 차단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전략적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들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용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의 이윤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늦여름에 런던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으킨 혼란은 그런 힘을 잘 보여 준다.

마르크스의 노동계급 개념은 언론과 학자 들이

주장하는 진부한 노동계급 개념과 달랐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들은 남성·생산직·공업 노동자들만이 노동계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려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에 따라 계급을 규정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서는 먹고살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한 사람은 모두 노동자이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주의 기업에 팔아야 한다. 거래할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직장에서 착취당한다. 이런 의미의 노동자는 꼭 육체 노동자나 공장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무실·병원·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이다.

다수

물질적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도 노동자일 수 있다.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고용된 사람도 노동자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광범한 사회화 의미의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이다. 이런 의미의 노동계급은 세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동부 연안의 공업화로 세계 노동계급의 규모와 힘이 엄청나게 증대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을 구분했다. ‘즉자적 계급’은 그냥 생활하는 계급이고, ‘대자적 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자의식적 정치 주체를 가리킨다. 마르크스는 그의 청년 시절에 일어난 투쟁들 — 특히 영국

차티스트 운동과 1848년 프랑스 혁명 — 에서 노동자들의 정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봤고, 이런 정치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대자적’ 계급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장기간의 고통스런 과정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승리뿐 아니라 패배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잠시 권력을 잡았지만 곧 지배계급에게 짓밟힌 1871년의 파리 코뮌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끌어냈다.

파리 코뮌은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권력, 곧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권력보다 근본적으로 더 민주적인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 줬다.

마르크스는 사실, 자본주의의 대안인 사회주의가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발전해 나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불렀다. 노동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조직과 투쟁을 통해서만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엘리토드, 그들이 아무리 자비롭더라도, 노동자를 대신해서 노동자를 해방시킬 수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은 옛 소련·동유럽·중국을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지배한 스탈린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사회들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을 뿐이다.

1980년대 말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등장한 새로운 저항 운동들은 투쟁 과정 — 노동자들이 자의식적인 ‘대자적 계급’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마르크스가 기대한 — 의 혁신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런 운동들이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마르크스를 역사적으로만 의미있는 진부한 인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약탈하게 착취하는 세계 자본주의에 맞선 우리의 새로운 투쟁에 마르크스를 꼭 필요한 동반자로 여길 때 그런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1968년 반란 40주년



1968년 거리로 뛰쳐나온 프랑스 노동자들

올해 여러 곳에서 1968년 반란 4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나 학자들, 심지어 적잖은 좌파들도 1968년을 “학생 소요의 해”라고 부른다. 그들은 1968년의 역사에서 노동자 투쟁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

물론 1968년에 세계 수십여 개국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가 벌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 투쟁이 학생 투쟁과 만나기도 했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다.

1968년 5월, 프랑스 노동자들의 80퍼센트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파업의 도화선은 학생들의 투쟁이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탄압에 저항하면서 확산된 대학생들의 점거와 시위는 신속하게 국내 문제로 연결됐다. 학생들은 대학의 구닥다리 규율과 나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싸웠다.

청년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시위에 동참했고, 연대 파업도 벌였다. 파리에서만 시가 대열이 수십만 명에 이르자, 폭력적인 탄압으로 대응하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며 경찰을 대학과 파리 거리에서 철수시켰고, 연행된 사람들의 전원 석방과 휴교 조치된 대학들의 재교를 약속했다.

프랑스의 5월 투쟁은 ‘국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드골의 소신을 무너뜨렸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학생들의 용기와 단호함에 밀려 양보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드골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공장 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항공기 제조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저마다의 요구를 내놓고 파업에 들어갔다.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양시켰다. 버스 노동자들은 파리 근교 한 소도시의 버스 1백80대 중 단지 10대만을 운행하게 만들었고, 택

시·우체국·병원 노동자들, 항공 교통 통제업무 하는 노동자들, 기상대 노동자들도 파업을 했다.

영화제작자 노동자들의 파업과 영화인들의 저항으로 칸 영화제는 열릴 수 없었다. 뉴스는 부분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노동자들의 통제를 받았다. 인쇄 노동자들은 신문을 인쇄하기 전에 〈르 파가 로〉와 〈라 나시옹〉 같은 보수 우익 신문들의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에 항의하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드골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위한 연회를 열고 싶어 했지만, 좋은 포도주와 고기를 실은 비행기는 항공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륙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전까지 프랑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져 차별받던 이주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낭트 시의 경우 일주일 동안 도시와 외곽지역을 노동자들이 직접 제어했다. 파업위원회의 주도로 운송노동자들이 도시의 모든 차량을 통제했고, 교사와 학생은 탁아소를 마련해 휴교 기간 중 파업 노동자들의 아이를 돌봤다.

식료품 분배도 역시 파업위원회가 수행했다. 이 위원회는 독자적 통화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낭트 시의 범죄율은 역사상 유례없이 낮아졌다.

이 같은 파업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정부와의 협상으로 10퍼센트 임금 인상, 법정 최저 임금 35퍼센트 인상, 파업과 공장 점거 기간의 임금 절반 지급을 약속받고 투쟁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하는 자신감도 보여 줬다.

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국민들에게 1968년 5월의 정신·행정 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을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2주 사이에도 교육공무원 갑축에 반대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새로운 68혁명이 필요하다”는 구호를 내어놓고 있다.

《뉴스위크》가 “한국의 사르코지”라고 부른 이명박도 이 같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68반란과 같은 노동자·학생들의 거대한 투쟁과 파업이야말로 우파 정권을 뒤엎는 진정한 세력이 될 것이다.

백은진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편집자 주] 해진 · 예술의 비극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익 언론과 이명박 정부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존 몰리뉴의 이번 칼럼은 맑스주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범죄가 성(性) 관련 범죄일 경우 사람들은 특히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고, 어린이가 피해자나 가해자일 때는 훨씬 더 불안해 한다.

자본주의 언론은 항상 이런 비극적 사건들을 좋아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은 오래된 공식에 따라 충격적 · 선정적 보도를 쏟아낸다. 적어도 처음에는 피해자를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받은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용의자나 피고인은 ‘사악한 괴물’처럼 묘사한다. 그러다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드러나면, 언론은 그 가족의 사생활도 낱알이 파헤쳐 가차없이 웃음거리로 만든다.

물론 언론이 그런 짓을 하는 주된 동기는 신문을 더 많이 팔아먹거나 시청률을 올려서 이윤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언론을 통제하는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적 · 정치적 동기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이유를 알아야 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타고난 악마

우리 지배자들에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따라서 위로부터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대체로 이롭다. 인간 본성의 고유한 결함들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래된 기초이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악하다는 메시지를 언론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또는 전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성(性)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고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치부한다. 이런 견해는 연쇄강간 · 연쇄살인 · 아동학대 사건처럼 성을 폭력이나 범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 더욱 강화된다.

지배계급은 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두려워하기를 바란다. 외부의 적(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 이주노동자, ‘무서운 십대’나 학교 폭력 씨클(조직 폭력배), 연쇄살인에 맞들여 수풀 속이나 오솔길에 숨어 있는 남자를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자신감은 줄어든다. 우리가 이웃

과 직장 동료들을 두려워할수록 지배자들에 맞서 단결하기는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더 원자화되고 고립될수록 우리의 저항력은 약해진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특히 흉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지배자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전반적 지적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우리가 사회 구조나 인간의 행동을 일관되게 또는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타고난 악마’가 존재한다는 도덕주의적 · 미신적 관념이 대중 속에서 널리 퍼지면 아주 좋아한다. 정작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성범죄는 그런 관념을 부추기는 아주 좋은 재료이다. 슬픔에 빠진 친척들이 그들의 감정을, 증오심과 복수심을 마구 터뜨리도록 대중 매체들이 얼마나 자주 부추기는지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히스테리컬한 분위기에서 당국의 ‘강경 대처’나 ‘강경 대응’ — 형량 강화, 사형제 부활 따위의 —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리고 때때로 지배계급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런 요구와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한다.

지배자들은 흉악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렇다면, 언론과 지배계급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맑스주의자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이런 흉악 범죄들(아동 성추행 · 살해, 연쇄강간 · 연쇄살인 등)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전체 범죄발생률이나 범죄가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언론 보도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낮거나 미약하다. 특히, 가장 끔찍한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범죄보다는 실업, 물가인상, 집세 인상, 사회복지 삭감, 질병, 교통사고, 가정 내 사고, 전쟁, 기후 변화 따위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훨씬 더 크게 위협한다.

히스테리

둘째, 그런 사건들은 항상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에게 끔찍한 개인적 비극이고, 사실은 가해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 언론의 사생활 공개나 선정적 보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도 ‘괴물’이나 ‘타고난 악마’는 아니다. 타고난 천사가 없듯이 ‘타고난 악마’는 없다. 심지어 히틀러도 ‘타고난 악마’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어리석고 반동적인 관념이

다. 범죄의 가해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겪는 소외 · 억압 · 착취의 끔찍한 압력에 짓눌려 망가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소외 · 억압 · 착취의 압력은 우리 모두의 삶을 어느 정도 일그러뜨린다.

구체적 사실들을 무시한 채 모든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만병통치약 같은 범죄 이론이나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설명보다는 사회적 · 심리학적 설명에 훨씬 더 무게를 뒀야 하고, 초자연적 · 미신적 설명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 말은 빈곤이나 실업이나 그와 비슷한 객관적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강간 · 살인 · 아동학대를 저지른다(그런 요인들이 마치 유아사망률을 높일 수 있듯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특수한 경험 — 가족 내에서의 또는 어린 시절의 — 과 맞물려서 인간성의 붕괴 가능성을 증대시키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언론이 부추기는 온갖 증오와 히스테리를 맑스주의자들은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수를 부르짖는 것에 반대한다. 복수는 피해자에게 이롭지도 않고 복수를 감행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형량을 강화하랴거나 더 가혹한 새 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에도 반대한다. 그런 조처들이 범죄 억제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 분명히 흉악 범죄들은 비이성적이고, 따라서 이성적 계산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지배계급이 그런 조처들을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법률이나 경찰 · 법원 · 감옥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처는 모두, 비록 겉보기에는 극소수의 ‘악한들’을 겨냥한 것일지라도, 사실은 국가의 전반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노동계급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고, 국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착취를 보증하는 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유별나게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뒤 도덕적 공황 상태에서 강행된 조처들은 국가가 다른 경우나 다른 적들 — 산업 현장의 투사들이나 정치적 반대자들 — 을 상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즉 그런 범죄를 만들어 내는 사회, 병들고 폭력적이고 성차별 · 인종차별적이고 착취와 소외로 점철된 사회를 끝장내는 것뿐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대거 늘어나 범죄, 테러 등 사회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 — 인간사냥과 단속·추방 — 을 씀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빈곤·소의 심화를 만들어낸 정책들이 범죄 증가의 진정한 이유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제국주의 전쟁 지원이 테러 위험을 높이는 진정한 원인이다. 게다가 정부의 법 집행은 완전히 인종차별적이고 계급 차별적이다. 한국에 맘 편하게 체류할 ‘비자’ 발급 여부는 순전히 돈과 출신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법무부는 올 8월부터 2백만 달러였던 투자자 영주권 취득 요건을 1백50만 달러로 낮추고, 세계 유수의 기업과 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입국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연다.

어렵사리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온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런 기회는 완전 봉쇄돼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이 되는 이유는 바로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혹사 노동과 저임금에서 벗어나려면 직장에서 도망쳐 위험천만한 ‘불법’ 신세가 되는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언론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 인력 수입 정책이 ‘하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생계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없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왔다. 가장 밑바닥 일자리는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고 그 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나가고,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마저 공격해 전체 노동시장을 초 유연 노동시장으로 만들어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잘못은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죄밖에 없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유롭게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현지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노조 활동가들에게 ‘테러’를 자행하며 이윤을 뽑아내 돈을 벌면서, 이들 나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한국인 노동자들

라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왜 여기서 자유롭게 일하며 돈을 벌면 안 되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의 일자리, 임금을 공격하면서 비열하게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한다. 우리가 정부와 언론의 위선에 맞장구치는 순간 어느새 우리의 진정한 적은 가려진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 줘서는 안 된다. 굶주린 맹수는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부쩍 강화해 왔다. 경찰은 이제 그 대상을 내국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지배자들의 추악한 위선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비난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인권, 민주주의, 삶의 후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추천
도서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아비바 촘스키, 전략과문화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불법 이민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범죄자이므로 추방돼야 한다” 등 이민·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널리 알려진 잘못된 신화와 믿음 스물 한 가지를 낱알이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아비바 촘스키는 노엄 촘스키의 장녀로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집트

50년 만의 가장 큰 파업 물결

무바라크 정부는 마할라 방직 공장 노동자 투쟁을 혹독하게 탄압했지만, 이집트에서는 시위와 파업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마할라 항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할라 노동자들에게 한 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뇌물 주기’는 역풍을 맞았다. 이집트의 다른 노동자들도 똑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와바리아트 사마누드의 방직 노동자들도 공장을 점거하고 마할라처럼 보너스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1천3백 명의 종업원 중 절반이 여성인데, 이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점거 파업에 동참했다.

만수라 에스파냐에서도 점거 파업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이전 파업 때 합의된 내용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데 분노했다.

바하리야의 사막 오아시스에서는 5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최루탄 연기를 뚫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지방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지방정부는 곧 항복했다.

생계임금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운동은 치과의사들에게까지 확대됐다. 의사 협회는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보안군의 방해로 무산됐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물결은 2006년 마할라 노동자 투쟁으로 시작됐다.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다. 영국의 맑스주의자 **사디 로빈슨**이 식료품 가격 급등에 얽힌 각종 착각과 혼동을 들춰낸다.

지난 몇 년 동안 밀, 옥수수, 콩, 쌀 등 세계인들의 주식(主食)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의 조세트 쉬란 사무총장은 4월 초에 이렇게 경고했다. “‘신판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식료품 값이 너무 올라 굶게 된 사람들이다.”

최근 식량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양하게 있다. 인구 성장, 소비 패턴의 변화, 기후변화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위기를 초래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다.

일부 우파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황은 일시적 일탈이고 시장을 통해서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아와 식량 위기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본래적 특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빈곤에 직면했지만 극소수 부자들은 가격 앙등을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다.

카길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 소유 기업이자 대형 곡물 거래 기업 — 같은 농업 기업은 4월 초에 2008년 1/4분기 이윤이 86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자유시장’은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자유시장’은 정부 관세, 보조금, 경제 정책에 의존한다.

기층 저항이 두려운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주식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국내 공급을 유지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들은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각 갑작스런 [식량] 부족이나 패닉 상태가 발생해 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식량 가격 인상 반대 투쟁이 증대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방글라데시,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이집트, 아이티, 아이보리 코스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세네갈, 마우리타니아, 기니(코나크리)에서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파업, 거리 시위, 소요 사태 등이 발생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식량을 얻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빵 값 인상이 이집트 정부를 뒤흔든 최근 파업 물결의 주된 원인이었고, 방글라데시 방직 공장

노동자들도 지난주에 쌀 값 인상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였다.

자본주의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것만큼 이 체제의 모순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식량 위기를 둘러싼 다섯 가지 신화를 폭로하고자 한다.

1 인구가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은 현 식량 위기가 세계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주장은 사람들이 생산 방식을 개선해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지 않는다.

18세기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가 처음 이런 주장을 했다. 맬서스는 부가 증가하면 인구가 급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세계 인구는 꾸준히 늘어 왔지만, 세계 농업은 30년 전과 비

교했을 때 매일 1인당 17퍼센트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3천5백 칼로리씩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밀, 쌀과 다른 곡물들이 이미 생산되고 있다. 여기에 고기, 야채, 견과류, 콩 등이 추가된다.

영국 보건부는 보통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는 하루 2천5백 칼로리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식량은 과소 생산이 아니라 과잉 생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굶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맬서스의 이론을 ‘반동적’이라고 평했다. 그가 옳았다.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문제다?

주류 언론은 중국의 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하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경제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비량은 미국과 영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중국인의 고기와 유제품 소비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은 쌀, 밀, 옥수수를 포함해서 여전히 많은 식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다.

중국의 식량 수입량이 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더 많은 이윤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3 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량 가격은 대부분 이미 국제시장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돈을 식품에 투자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이 금을 투기보다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식 거래인들은 미래에 물 가격이 폭등할 거라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투기는 식량 가격을 높인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매력적인 투기처가 된다. 식량 거래상들은 사재기에 나선다. 잔뜩 사들인 뒤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려는 것이다.

식량 가격 상승에는 몇 가지 장기적인 경향이 영향을 끼쳤다. 그것들은 모두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식량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결과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지난 30년 동안 토지 사용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국내 소비용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와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압력이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이다.

구조조정계획(SAP) — 나중에 빈곤감소 전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 사례다. 빈국들이 국제 지원을 받거나 자금을 빌리려면 이 정책들을 국내에 적용해야 했다. 여기에는 공공지출 삭감, 사유화, 세계 시장에 대한 개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농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예컨대 세네갈 정부는 1986년에 구조조정계획을 받아들여 농민 지원책을 폐지했다. 정부 지출 삭감과 무역 자유화로 농민들은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배제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 소비용 기초 식량 생산이 줄었고 수출용 식량 생산이 늘었다. 1990년에 세네갈 인구 중 30퍼센트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2년에는 40퍼센트로 늘었다.

그런 정책들은 빈국 사람들의 지급용 식량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세계 식량 산업에 더 의존하도록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식량의 평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이오연료 투자붐이다. 옥수수와 밀 같은 곡물들이 연료 생산에 쓰이고 있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은 내년에 총수확량 중 거의 30퍼센트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들은 식량 재고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방지했다. IMF는 빈국 정부가 식량 재고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이 ‘자유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말이다.

심지어 어떤 정부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저장 식량을 팔아야 했다.

4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농업 — 특히 남반구 농업 — 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비록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에 이상 기후를 가져와 곡물 수확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기후변화만으로 빈곤과 굶주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그것이 식량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다. 많은 빈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방글라데시는 제방, 사이클론 대피소, 도로와 다른 사회기반시설 등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20억 파운드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투자가 없어서 방글라데시 빈민 1천만 명은 매년 홍수의 재앙에 고통받는다.

식량 위기를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계급으로 나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홍수나 기근으로 농사를 망친 나라의 부자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는다.

또, 이런 식의 설명은 각국 정부들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기후변화만으로도 꼭 굶주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후변화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5 유전자조작 작물이 대안이다?

이따금 유전자조작 작물이 전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유전자조작 작물은 병, 벌레나 기후변화에 저항하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작물을 말하며, 그만큼 수확량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의 도입은 기아를 없애지 못했다. 다만 불평등을 강화할 뿐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유전자조작 작물을 이용해 세계 식량 생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부국에 대한 빈국의 의존을 더 심화시켰다.

캔자스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보면, 논란이 많은 이 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흔한 주장과는 달리 유전자조작은 작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곡창지대에서 행해졌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자조작 콩이 그렇지 않은 콩보다 10퍼센트 더 적은 식량을 생산한다.

게다가 유전자조작 식품은 안전성도 의심받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홍보하는 측은 1960~70년대 ‘녹색 혁명’ 당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녹색 혁명으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씨앗과 작물이 개발됐고, 특히 인도에서 기아와 기근을 해결할 수단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오늘날 2억 3천3백만 명의 인도인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실조 발병자 수도 1990년대 내내 늘었다.

식량 생산이 늘어도 기아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아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식량 생산 방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8년
1사분기

1000

타이산 쌀 가격
(톤당 달러)

800

600

400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장호중

기업주 ·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중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 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에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급도 적고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는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꺾테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60퍼센트에서 전 국민 8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수급 대상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등 ‘중복급 여금지’ 대상이라서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은 없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형편없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계를 위해 사회적 연금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악이 추진되면서 2004년 5천억 원 수준이던 민간 연금보험 판매량이 2007년에는 3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간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최고 80퍼센트 정도만 돌려준다.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삼성생명 등 보험 재벌들만 배 불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 서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아예 기업주들에게 내주려 한다. 노후 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면 대부업자들에게 연금 일부를 내주는 것은 빚산의 일각일 뿐이고, 연기금을 온갖 투기판의 판돈으로 써먹으려 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주식 · 해외 부동산 등 위험 자산 투자 확대’는 기업주들의 손해를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효과를 낼을 것이고 ‘국물 · 석유 등 원자재 투자 확대’는 세계적 식량난과 원자재 난을 부추겨 가난한 나라의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명박은 공무원연금부터 삭감

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특혜’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기업 노동자들보다 10퍼센트 이상 적고 연금 보험료는 두 배 정도 높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퇴직금도 적고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형평성’은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다른 공무들에게 지급보다 더 많은 연금과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킨다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연금이 삭감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진 노동자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국민연금 삭감과 민간 사기업 노동자 퇴출의 전주곡이다. 오히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만 주지 않아도 이 정도 제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다. 봉하마을에서 서투른 ‘쇼’를 하고 있는, 더는 기억하기도 싫은 노무현은 4백95억 원짜리 집을 선물받고도 매달 1천5백 15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명박은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의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사유화 시도에 맞선 투쟁의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은 연금과 더 나은 일자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하자.

2005년

2006년

2007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에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피해 부모가 느낄 분노와 상실감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한다면, 아마 많은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성적 억압과 소외다. 한 연구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의식의 특징을 “낮은 자긍심, 높은 성(性)적 좌절, 부정적인 성적 자아 이미지”라고 지적했는데,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성적 좌절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꼽았다(《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따라서 성적 억압과 소외를 낳는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 좌절한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CCTV가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해서, 좌절한 개인들이 타인에게 저지르는 억압적 행동을 통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과연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책이 성범죄를 대폭 감

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범죄학자들이 국제비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범죄로 꼽는 살인사건 발생률은 미국이 가장 높다. 보고된 폭력범죄 발생률도 북유럽보다 월등하게 높다.

불평등이 증가하면 살인, 강간, 강도 등 개인들 사이에 온갖 종류의 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다. 따라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시장 정책이나 여성 차별 정책 반대 등)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책이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려면, 범죄 예방 효과도 별로 없고 인권 침해에 이용될 소지가 큰 CCTV를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 곳에 안전요원(범죄뿐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범죄자 개인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회에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구조적인 것이다. 비록 북유럽의 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 낮지만, 그곳에도 심각한 계급 불평등이 있고 여성 차별과 성 억압도 존재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없애려면, 평등과 우애, 상호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정진희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18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인식 서울 중구 후보의 정책기획 담당자로서, 지난 신문에서 백철 동지가 선거 평가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동지의 지적처럼 주관적 요인도 봐야 한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

김인식 선본은 “지역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우선 순위는 전국 의제에 있었지만 전국 의제와 지역 의제를 대립시키진 않았다.

우리는 뉴타운 같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와 다른 노동계급 삶의 공간 — 주거, 교통, 환경, 공공시설 등 — 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중구 거주 노동계급에게 시급한 공공시설을 요구했다. 지역 투자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도 주장했다. 정책 준비가 늦어 공보물에 누락된 점은 아쉽지만, 이것이 당장의 득표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미지수다.

한 편, 김인식 선본은 기업 탐욕 체제와 이명박 정부의 우파 개혁에 맞선 급진좌파의 대안 제시와 대중 저항 선동에 주력했다. 반(反)이명박·반우파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명박 취임 한 달 만에 곧바로 급진좌파 투표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긴 힘들었다. 이 조건에서 정범구 효과, 사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중의 경험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1천1백11표와 거리의 호응은 긴 안목의 대중투쟁 관점에서 실망할 수준이 아니다. 나는 백철 동지도 이런 가능성에 더 주목하길 바란다.

김문성

이명박은 지하철을 LG에 팔 셈인가?

최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명박이 있는 듯하다.

2004년 7월 버스와 지하철에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현재 교통카드(티머니 카드)시스템의 수입금은 서울시가 출자해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 김정근이 이명박의 외척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 천문학적 수입금을 각 운송기관에 배분하면서 통계자료나, 원칙도 없이 ‘너

희는 오늘 얼마, 너희는 얼마’ 하는 식으로 나눠주고 있다. 각 기관에서 수없이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다.

한편, 요즘 모든 지하철역에서 독점으로 휴대폰 장사를 하는 PHONE & FUN, 게이트를 출입할 때 밀어야 하는 쇠막대의 LG홈쇼핑 광고, 판매만 하고 고장이 나도 교환조차 해주지 않는 티머니 카드 등이 모두 LG와 관련이 있는데, LG는 이명박과 사돈관계다.

손병도(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지난 호에 정진희 씨가 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혐오 중단하라’는 기사는 매우 좋았다. 정진희 씨의 주장처럼 “미등록 이주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체류 자격 외 취업 등이 ‘불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출입국과 경찰 단속에 걸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경찰·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범죄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취업을 ‘범죄화’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모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일류, 선진화를 떠들어대는 정부라면, 비정규 이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주)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정원

군대나 다름없이 학살에 동참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찰
- 한국 경찰은 이들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중단하라

김광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테러 국제연대”를 약속하고 돌아온 ‘친미 불도저’ 이명박이 내놓은 첫번째 전쟁 지원 계획은 한국 ‘경찰’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이다.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국내 반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경찰 파견을 선택한 듯하다. 지난해 3월에 바그람 기지에서 윤장호 하사가 목숨을 잃었고, 8월에는 대규모 피랍사건이 벌어져 배형규, 심성민 씨가 피살됐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지난 1월 이명박의 특사 정몽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집요하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을 했고, 결국 이명박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부시에게 줄 선물로 아프가니스탄 경

찰 파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집요한 요청은 부시 일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해 있는 곤경과 관련이 있다.

탈레반을 비롯한 저항군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심지어 4월 27일에는 친미 폭두각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가 수도인 카불 한복판에서 저항군의 무장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해병대 3천 명을 증파했다.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규모도 2006년에 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 명으로 늘어났다.

점령, 군대, 경찰

한나라당은 “[경찰 파견을] 군대 파병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정략적인 태도”라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30명 인원이 교전지역이 아닌 대도시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맡고, 치안은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령 상태에서 무장 경찰은 군대에 준하는 구실을 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은 병력의 부족 때문에 2007년부터는 다국적군의 증강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군대와 경찰로 무장시켜 저항세력과 전투를 벌이게 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킬 계획인데, 이들은 저항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4월 15일에는 칸다하르에서 11명의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4월 23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저항세력과의 교전 끝에 아프가니스탄 경찰 10명이 사망했다.

이런 무장 경찰을 훈련시키겠다는 것

은 점령과 학살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지원이며 군대 파병과 별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한국이 경찰 훈련을 통해 점령을 다시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가말로 부시가 바라는 바다.

게다가 경찰 파견은 군대 재파병의 수순과 명분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경찰이 파견될 때 경비와 방어를 위한 무장 군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이라크 파병 때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으로 시작했다.

전쟁광 부시와 ‘친미 불도저’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 파견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대테러 국제연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전 운동은 어떤 형태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도 용납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이랜드 노동자의 편지

“동지들의 사랑으로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이 글은 4월 19일 이랜드 투쟁 3백 일 문화제 때 한 이랜드 노동자가 남긴 글의 축약본이다.

지난 여름 이 땅의 노동자로 당당하게 살고자 정당함을 부르짖고 인간답게 살아 보자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 저희들 곁엔 늘 우리 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셨기에 더욱 더 당당하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투쟁, 투쟁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3백 일이란 기나긴 투쟁으로 인해 저희는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날 ‘드려 전기가 끊어졌다’는 큰아이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답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투쟁 일정과 회의를 마치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켜 놓고 공부하고 있는 큰아이의 뒷모습을 보고도 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밤새 베갯잇을 적시며 고민했습니다. 진정 나와 우리 가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인가.

또한 며칠 전 작은아이가 보낸 문자에는 ‘급식비 못 내서 점심 못 먹으면 운동장



수돗가에서 물이나 먹지 뭐’ 하며 제 가슴을 굶어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려 망먹고 한 자 한 자 짙어 내려가는 그 아이의 고통스러웠을 순간을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힘은 ‘엄마, 전기 끊긴 열흘 동안 오히려 집중도 더 잘 됐고, 책도 10여

권이나 읽었어요’ 하고 말해 주는 큰아이의 한마디와 ‘급식비 못 내서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 안 믿었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잔반 없이 먹어야겠다’는 작은 아이의 일기장에 적힌 두 줄.

또한, 오늘도 투쟁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 저 못지않게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해 나가며 서로 어깨 곁고 보듬어 안고 힘찬 팔뚝질과 투쟁을 외치는 밝고 당당한 모습들이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고 와 준 힘이라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은 우리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는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의 사랑과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들께 감사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동지들의 사랑으로 저희 투쟁 승리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